

1. 서론

농가의 최대 애로사항은 역시 가축분뇨 문제

협회가 08년도 협회 중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얼마 전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FTA 대책, 사료 값 상승, 소모성 질병 근절 등 현안 문제들이 제시되었으나, 다른 모든 사업들을 합한 것보다 많은, 전체 의견 중 68%가 분뇨처리 문제 해소를 꼽았다.

즉, 양돈농가를 대변하는 협회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절대 다수가 '분뇨처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협회에서 조사했던 01년, 03년, 05년 전업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체 농가 중의 70%가 양돈업 애로사항의 첫 번째 항목으로 분뇨문제를 꼽았다.

“돼지를 키우는 게 죄다”, “환경과, 환경감시원에서는 죄인 취급 당하고, 자칫하면 범법자로 낙인 찍힌다”, “분뇨문제만 해소된다면 양돈업 할 만하다”는 것이 양돈농가들의 말이다.

2. 본론

가. 정부도 가축분뇨 대책 강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방류수 수질 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강화(질소, 인 항목 추가), 환경단속 강화, 양분총량제 도입 검토 등 분뇨처리 문제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제 양돈업을 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가 가능한 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

정부도 이제는 환경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를 설치하고, 환경부에서는 한

가축분뇨 처리대책의 현재와 개선방안



조진현 과장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미FTA 체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대책을 발표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림부는 06년 341억원이었던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비를 07년 424억원으로, 08년 664억원으로 대폭 늘려서 집행할 계획이며, 환경부도 2012년까지 공공처리장을 16개소 확대하여 86개소로 늘리고 2,3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지난 07. 11. 28일 발표했다.

나. 가축분뇨 문제는 양돈협회의 핵심 사업

양돈농가의 대표인, 양돈협회 또한 양돈농가의 뜻을 모아 많은 사업들을 지난 07년 추진했다.

- ▲경종농가와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인식을 개최
 - 8/8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인식
-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퇴·액비 이용 교육 실시(8~9월, 전국에서 실시)
- ▲가축분뇨 자원화 애로사항 총 조사 실시
 - 9~11월, 전문가 검토 후 08년 1월 대정부 건의 예정
- ▲ '향후 가축분뇨 처리방안' 발표회 개최
 - 12/20, 건국대 산학협동관
- ▲해양배출 전면 중단 법제화 저지
 - 해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명시 제외
- ▲해양배출 의무 성분검사 반대
 - 의무 성분검사 가격 조정(약 50% 인하), 미검출 성분 의무검사
- ▲퇴·액비 품질 기준 완화 요구
 - 농림부,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액비품질 기준 질소 3% → 1%

로 완화

- ▲양돈분뇨 배출원 단위 조사 추진
 - 기존 8.6리터 5~6리터로 조정 위해 축산과학원과 연구사업 추진 중
- ▲공공처리장 운영 개선 연구용역 착수
 - 허가농가 배출 허용, 민간 운영 허용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
- ▲개별 농가 분뇨처리시설 단가 상향 조정
 - 기존 74,000원/m², 한도액 3억원의 분뇨처리 시설 단가 상향 조정 검토 중(농림부)
- ▲밤나무 밭(임야), 골프장에도 가축분뇨 액비 살포 허용 요청
 - 농림부 밤나무 밭(임야) 허용 추진 중

이외에도 액비 200m 살포 기준 완화, 복잡한 액비 살포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다. 가축분뇨 처리 사업 개선 방안

현행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큰 맥락으로 볼 때 가축분뇨 퇴·액비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공동·공공처리 확대 등 본회가 그간 요청해 온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부 추진내역 중에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저해하고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문제 해소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공공처리장

첫째, 신고 규모 미만 농가만 배출이 가능한 현행 법률을 조정해야 한다. 신고규모(50m²) 이하 양돈농가의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실제 허가 농가의 분뇨를 받아 처리하는 곳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

러한 규정은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처리 중간단계에서 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의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퇴액비 이용시기에 중간단계의 호기성 발효된 우수한 액비를 자원화로 이용할 수 있다면 2배 이상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셋째, 운영주체를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휴일, 일요일에 가동을 중단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지만 효율이 낮은 공공처리장을 민간 또는 축협 등이 운영하여 최대한 운영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공동자원화

정부가 07년도부터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 확대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민원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공동시설을 기존 양돈농가에 분산 설치하는 방법 또한 검토 중이다. 양돈농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지역의 민원 해소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양돈농가의 분뇨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지적한다.

첫째, 각 농가별로 6개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6개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과도한 액비 탱크 설치비가 소모된다.

둘째, 대량으로 일정한 품질의 액비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비처방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 처리 물량이 방대하여 사실상 재활용 신



고 규정상의 따른 넓은 농지면적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량으로 액비를 처리하는 공동처리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 부분들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일반 개별농가 처리시설 규정을 공동자원화 시설에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 및 처리규정 적용이 필요하다.

3) 액비 이용 개선방안

첫째, 정부가 지난 11월말 액비의 성분을 비료 공정법상의 품질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제 액비 살포시 시비처방서 만으로 뿌릴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즉 불필요한 토양분석, 살포면적 확보 절차를 없애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살포면적 확보를 기존 640m²(수도작 기준)에서 300m²으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06년 대책에서 살포면적 확보 기준을 없애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둘째,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현행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로 인해 액비 살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시군별로 기존 조사되어 있는 토양의 성분과 작물별 시비량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시비처방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가 200m 이내 살포 금지 조항을 없애

야 한다. 액비 살포규정에는 이미 냄새없는 액비를 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가 200m 이내에 대부분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그 외에도,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 살포시 탱크 별로 기 신고된 농지에만 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시비처방서 액비 살포량이 실제 적정 살포량보다 적게 처방되는 점, 타 지역 액비에 대해 시비처방서 발급이 어려움 점, 임야에 포함된 과수원, 골프장에는 액비를 뿌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이 개선사항이다.

4) 퇴비 이용 개선방안

정부는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와 농경지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기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축분뇨가 아닌 수입 유박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가 크게 늘고 있고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최소한 국내 가축분뇨 처리도 문제가 있어 양분총량제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유박비료, 건계분 등)에 대한 보조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현행 1.5톤 이상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모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1.5톤의 기준 생산량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데만 전념하자”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의

견을 정리하였지만, 양돈농가들이 바라는 최종적인 가축분뇨 문제 해소 방안은 양돈농가의 손을 떠나는 것이다. 즉, 공동·공공처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배출자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여태껏 개별 양돈농가에 가축분뇨처리를 맡겨 왔지만, 1조원이 넘는 정부의 예산을 소비하고도 확실한 처리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분뇨를 자원화를 하려 해도 각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퇴액비 품질에 경종농가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정화처리를 해도 관리와 운영의 미숙함으로 방류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처벌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부와 환경부가 중규모 양돈농가 가축분뇨 배출량의 60%를 향후 공동·공공처리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돈농가들도 아무 비용 부담없이 처리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분뇨처리비를 부담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초기의 높은 시설비와 전문처리주체(민간, 지역 농축협 등)가 수익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양돈 선진국과 무관세로 경쟁해야 하는 FTA 시대, 양돈농가들이 유럽의 절반 수준의 생산성을 극복하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데만 전념해야 한다.

돼지를 돌보아야 하는 양돈농가들이 하루의 절반을 분뇨처리장에서 보내고, 돼지 팔아서 번 돈을 분뇨처리에 다 쏟아 붓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기대하겠는가? **양돈**